

민주, 경선 흥행만큼 고민도 만만찮네

5일만에 선거인단 40만명 신청...최대 250만명 예상

관리비 최소 50억...특정후보 탈락 노린 '역선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경선비용 증가와 역선택 논란 등 각종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40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인단 신청이 폭주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최대 250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 모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선 관리비 50억 상회=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가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 신청에 필요한 ARS 회선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 같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경선비용 증가 등 우려도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인단 100만 명 모집에 최소 17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선거인단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선거인단이 200만 명에 달할 경우 선거인단 모집 비용과 순회 투표, 토론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면 대선 경선에 최대 5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경선 비용이 애초 예상한 45억 원보다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위장전입' 논란까지=신청자의 주소 검증이 안돼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등록하는 '위장전입 투표'가 첫 순회경선지인 호남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선거인단 신청시 다른 지역 거주자가 첫 순회경선이 열리는 광주로 주소지를 입력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대해 "현 시스템상 실제 주소지와 달리 신청했을 때 체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역선택 영향 미칠까=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다수의 조직이 개입하는 이른바 '역선택'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 특성상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자들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이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낙선을 보수진영이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와 같은 보수단체의 경선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문맹'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미에 대표는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 (경선용) 방해하려는 태세가 보인다.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며 법적조치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보수세력이 선블리 역선택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투표소투표 결과를 순회경선 첫 장소인 광주에서 발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만큼 중앙선관위 문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권 도전하는 지자체장들

안희정·이재명 등 5명 나서...홍준표도 검토

대권을 꿈꾸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선을 위해 한국 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 주변에 사무실이나 캠프를 차리고 인재들을 끌어 모으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 단계에서 야권의 유망한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정도에 불과하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된 최성 고양시장은 다른 3명에 견줘 지지율이 미미한 게 현실이다.

범여권은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나할 것 없이 출사표를 던질 태세다. 현직 가운데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성완중 리스트' 사건 혐오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바른정당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저마다 지역에서 탄탄한 조직과 지지 기반을 갖춘 지자체장은 대선 때마다 무시할 수 없는 '잠룡'이었다. 그러나 '상공 사래'는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뿐이다.

그럼에도, 몇몇을 제외하면 당선권에 들지 못한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대선에 뛰어든 이유는 '요행'을 넘은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지자체장은 19일 "선거는 또 있고, 정치도 계속해야 한다"며 "대권 도전이 반드시 당선 가능성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몸집 부풀리기 차원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또 일부는 정치적 무대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상 대권에 도전하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도 3파전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민의당 경기도당 10만전사 출정식에서 안철수 전 대표(왼쪽부터), 천정배 전 대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손을 맞잡아 높이 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당한 대가 받는 사회 만들 것"

정의당 대선후보 확정

정의당이 지난 16일 심상정 상임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심 상임대표는 지난달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가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소속 후보로 나섰지만, 막판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퇴했다.

당시 심 상임대표는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보단일화를 위한 중도사퇴는 제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4당·5당 체제인 현 다자구도 속에서 심 상임대표가 이번에는 대선 가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심 상임대표는 지난달 16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목표물이 자기 정부의 개혁성을 드러내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소속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비춰보면 심 상임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연대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며 정의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조기대선 정국에서 변수가 끼어들 경우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한번 단일화나 지지선언을 통해 민주당 문 전 대표의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오늘 광주 총출동...현장 최고위

국민의당이 당내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생탐방 등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꾀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0일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는 박 대표와 주 원내대표, 문병호·김영환·황주홍·조배숙·신용현·김지환·박우섭 최고위원과 권은희 광주시당위원장, 천정배·박주선·장병완·김동철·김경진·최정환·김삼환 의원, 손학규 의장 등이 참석한다. /최권일기자 cki@

공정성 VS 흥행...국민의당 경선룰 '모바일 투표' 쟁점

본인 확인 불가·집계과정 불투명 단점 孫·千 부정적 현장투표제 국민 관심·참여 저조 우려...安 입장 안밝혀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공식 입당을 계기로 대선후보 경선 준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모바일 투표'가 경선 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의 채택 여부를 놓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입당 후 기자들

과 만나 경선 룰에 대해 "모바일 투표는 절대 안 된다.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각자의 휴대전화로 선거에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는 원천적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데다 집계와 개표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불투명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천정배 대표 측도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모바일 투표에서 밀리며 결국 쓴잔을 마셨던 경험이 있기도 하다.

이에 손 전 대표 측은 100% 현장투표로 경선을 치르되 최대한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국 지역 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기간도 길게 잡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배

제하면 경선 흥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굳이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 현장투표로만 경선을 치를 경우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 지적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1·15 전당대회 때도 현장투표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배합한 바 있다. 아직 협상 일정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모바일 투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후보들 간의 치열한 유불리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담양 대덕 호두농장 **특산물**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신임정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대표 진철호
061-382-4728 / 010-3604-6712
전남 담양군 대덕면 남대덕로 424-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뜸, 서암은열뜸기, 아큐뜸, 금뜸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한국의 180여 지회들이 이용 바랍니다.